

양도세 중과 부활에 시장 촉각…광주·전남은 영향 미미

수도권 규제지역 한정…지방 주택 보유자는 대상서 제외
상대적으로 가격 낮은 지방으로 투자수요 이동 가능성도
이 대통령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중과 적용 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미분양 증가와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택업계에선 오히려 이번 수도권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다소 이론 감은 있지만 지방 투자수요를 불러오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다.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20~30% 가산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세입자 끼니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로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못 박았고, 최근 X에서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광주·전남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에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중과 부활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다”면서도 “만약 광주·전남 거주자라도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시장에 어떤 간접 효과를 미칠지다. 수도권 매도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이 낮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 쪽 투자자들이 눈을 지방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후 지방 아파트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에도 풍선 효과로 지방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만약 부동산 시장은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광주까지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효과가 일부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성을 시사한 발언도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리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가지고 버티겠다는 시장 일각의 분위기를 거냥하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 강화와 보유세 논의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흐름과 투자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아직은 이르지만 수도권 규제가 지방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며 “현재는 자금이 증권 시장으로 많이 이동해 있지만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또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 광주·전남 전년비 2배 이상 증가

전국 가입자수 40.6% 늘어

경기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안전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한달간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수가 2만 5062명으로 전년 동월(1만 7819명) 대비 40.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가입이 편리한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수는 6801건으로 전년 1월(4047명)보다 68.1%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부터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을 돋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전남 가입자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 신규 가입자 수는 691명으로 전년 동월(315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전남 역시 108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67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가입자 수도 전년 대비 광주 68명, 전남

108명 많아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안전망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란우산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 편의성 등으로 온라인 가입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으로 가입자 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오는 28일까지 노란우산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5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디지털예금 특판 이벤트’…연 3.01% 금리 제공

다음달 12일까지…3000억원 한도

광주은행은 4일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디지털예금 특판 금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 판매 상품으로, 최고 연 3.0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오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3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실명 개인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가입을 포함한 최근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 중도 해지 이력이 없는 개인 고객이다.

금리 혜택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입 기간 12개월로 신규 가입 후 만기해지하면 최고 연 3.01%를 제공한다. 이는 기본금리 연 2.70%에 마케팅 등의 우대금리 연 0.10%포인트(p), 이벤트 우대금리 연 0.21%p를 더한 금리다.

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 시 최고 연 2.91%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65%에 마케팅 등의 우대금리 연 0.10%p, 이벤트 우대금리 연 0.16%p가 적용된다.



설 명절 우편물 1200만개 우체국 비상근무 체계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을 ‘2026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 소통 기간 전국에서 약 1232만 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를 예상했다. 하루 평균 154만 개로 지난해 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소포우편물이 안전하게 정시에 배송되도록 사항을 당부했다. 어폐류·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하고 부직포·스티로폼·보자기·포장한 물품은 종이상자 등으로 재포장해야 한다.

우편번호·주소 등은 정확하게 쓰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 기계·전기 시설 및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에 따라 특별 소통 기간 전에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증기부 ‘백년소상공인’ 300곳으로 확대

다음달 10일까지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 백년소상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증기부는 신규 지정 규모를 지난해 1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해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을 각각 150곳内外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기반 소상공인을 균형 있게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은 경영 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실시해 평가에 일부 반영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상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현판, 지정서, 성장 이력이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함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공인특화지원사업 등 증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과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증기부는 인천국제공항 내 전용 매장 운영,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대기업 협업 팍업스토어, 동행 축제 연계 기획전 등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증기부는 제도를 도입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백년가게 1407곳과 백년소상공인 919곳 등 모두 2326곳을 지정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증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ia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ADB 전력 인력양성’ 교육 기관 선정

파키스탄 전력분야 80명 교육

한국전력공사(한전)는 4일 “한전 인재개발원이 ‘파키스탄 청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전력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의 담당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3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기관 선정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 11개 전력 전문 교육기관들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업체자격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ADB의 ‘자격 기반 종합심사(SCQS)’에서 기준 점수(750점)를 넘어선 891점을 기록하며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한전은 향후 파키스탄에서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시장제도 도입 등 파키스탄 전력산업의 주요 이슈에 맞는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접속 증가에 따라 복잡해진 배전망을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배전운영시스템(ADMS)’을 소개해 파키스탄 전력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교육은 오는 4월 12일부터 9월까지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파키스탄 전력분야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접속, 에너지 저장장치(ESS), 가상 발전소(VPP),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MS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한림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배전스테이션 등을 현장 견학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65년만에 KS 인증제도 개편…공장 없어도 취득

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pariadae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자 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pariadae 이 과정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인증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문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 상장사 임원 제한

금융위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